

日帝下 朝鮮人 高等官僚의 삶과 의식

—高等文官試驗 行政科 合格者를 中心으로

張 信

歷史問題研究所

머리말

일제하를 살았던 인물들의 회고록을 읽다보면 종종 삶과 의식이 어긋나는 현상들을 종종 발견한다. 특히 시대를 초월하여 ‘성공’ 또는 ‘출세’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일수록 더욱 그러하다.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고급관료, 곧 고등문관시험 행정과를 합격하고 조선총독부 고등관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의 대부분은 관계에 진출한 일제시기부터 해방된 대한민국에서도 줄곧 ‘성공’ 한 사람들이었다.¹ 좋은 직장과 사회적 ‘존경’ 에도 불구하고 해방 이후에 쓰여진 회고록들은 일제하의 행적을 변명하거나 의도적으로 축소 또는 말소해버린다. ‘반성’ 하는 경우가 희귀해서 때때로 인구에 회자될 정도이다. ‘반성’ 할 이유가 없는, 오히려 ‘출세’ 의 첫 단추 시절을 스스로 삭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너무도 자명하다. 그들이 어떠한 동기로 관계에 입문하고 어떠한 자세로 관직을 수행했던 한국 사회에서 친일과를 지목할 때 1순위로 거론되는 조선총독부의 관료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친일과라는 단정적인 전제는 회고록에서 과거의 행적을 삭제시켰을뿐 아니라 관료 연구에도 큰 장애로 되었다. 근래 들어 일제하 관리임용제도의 개략적인 틀, 조선총독부 인사행정의 원칙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며, 관료층의 사회적 기반과 처우, 임용과 승진 등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제출되었다.² 이 글의 소재인 조선인 고등문관시험 합격자와 관련해서는 이기동, 장세윤, 정선이, 김용덕 등의 연구가 있다.

이기동은 합격자의 명단과 주요 관력 및 해방후 경력까지 정리함으로써 이 방면 연구의 선구가 되었다. 장세윤은 일제하 고등문관시험 합격자가 해방후에 권력 엘리트로 변

1 李基東, 「일제하의 한국인 관리들」 『新東亞』 1983.5

2 淺井良純, 「日帝侵略初期における朝鮮人官吏の形成について—大韓帝國官吏出身者を中心に」 『朝鮮學報』 155, 1995; 홍순권, 「일제시기의 지방통치와 조선인 관리에 대한 일고찰—일제시기의 근행정과 조선인 관리에 대한 일고찰」 『國史館論叢』 64, 國史編纂委員會, 1995; 권호준, 「1930년대 일제의 조선인 하급행정관료에 대한 정책」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안용식, 『한국관료연구』 대영문화사, 2002; 장신, 「1919-43년 조선총독부의 관리임용과 보통문관시험」 『역사문제연구』 8, 2002; 張信, 「朝鮮總督府의 人事政策研究—普通文官試驗 合格者의 任用과 昇進을 中心으로」 『東方學志』 120, 2003; 松本武祝, 『朝鮮農村의 <植民地近代> 經驗』 社會評論社, 2005; 박이택, 「조선총독부의 인사관리제도」 『정신문화연구』 29-2, 2006.6 등.

모하는 과정을 추적하면서 고등문관시험제도 및 합격자 일부를 소개하였다.³ 정선이는 경성제국대학 졸업생의 취업현황을 고문시험과 연결하여 정리하였다.⁴ 김용덕은 고문시험에 합격한 경성제국대학 출신 조선인 엘리트를 중심으로 그들의 삶의 궤적을 친일 및 해방 후 독재체재옹호와의 관련하여 분석했다.⁵

회고록에 표현되고 기존 연구에서 지적하듯이 이 시기의 관료는 일제의 조선통치를 기능적으로 집행하고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 시키는 역할을 하면서도 일본인 관료에 비해 급여나 인사에서 차별받는 존재로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조선인 관료 일반에 적용되는데, 이 글에서는 학업과 수험, 그리고 고등관견습 과정을 통해 행정관료로서의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고등문관시험 행정과 합격자를 대상으로 기존 평가의 타당성을 실증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고등문관시험과 조선인 합격자의 현황을 서술하고, 고문에 합격한 조선인 관료의 인사를 동일한 조건을 지닌 일본인 관료들과 비교할 것이다. 특히 조선총독부의 인사시스템이 민족별로 작동되었는지 아니면 학연 등의 또 다른 요인을 바탕으로 가동되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고등관과 고문 합격자에 대한 조선사회의 일반적 평가와 기대를 살펴보고, 조선인 최고의 엘리트로서 고문 출신 조선인 관료들이 지닌 정체성의 일단을 그려보고자 한다.

1. 고등문관시험과 조선인 합격자

1) 고등관과 고등문관시험

고등관은 일제의 관료 중 주임관 이상을 일컫는다. 주임관의 관등은 3~9등이며, 그 위에는 친임관과 1~2등으로 구성되는 칙임관이 있다. 통상 고등관은 군수, 도청의 과장급인 이사관 또는 도경시로 시작한다. 조선총독부 주임관 봉급표에 따르면 주임관의 등급을 크게 셋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제3호인 5등 이하의 고등관에는 재판소서기장, 재판소통역관이 해당된다. 다음으로 4등~8등의 2호에서 내무관료의 관명만 열거하면 이사관, 통계관, 토목사무관, 편수관, 통역관, 중추원통역관, 경찰관강습소교수, 도경시, 체신부사무관, 철도국 부참사, 전매국부사무관, 세무감독국부사무관, 司稅官, 세관관세관, 세관감사관, 부윤(경성·대구·부산·평양부윤 제외), 군수, 島司, 도이사관, 도시학관, 도경시, 도소작관, 府이사관 등이다. 고등문관시험 행정과 합격자들이 고등관견습을 거친 뒤 처음으로 임용되는 직급은 고등관 7등으로서 대부분 제2호의 어느 하나이다.

주임관봉급표의 제1호는 고등관 3등~7등인데, 조선총독부의 사무관급이다. 이에 준하는 관명으로는 (총독)비서관, 중추원서기관, 시학관, 체신사무관, 체신기사, 철도국

3 장세운, 「일제하 고문시험 출신자와 해방후 권력엘리트」 『역사비평』 1993

4 정선이, 「식민지기 대학졸업자의 취업상황과 그 성격 연구」 『교육사학연구』 12, 2002.

5 金用德, 「京城帝國大學韓人出身エリートの行路—高等文官試験合格者の親日および獨裁體制擁護と關聯して」, 宮嶋博史·金容德 編, 『近代交流史と相互認識 III—1945年を前後して』慶應義塾大學出版會, 2006

참사, 전매국사무관, 세무감독국사무관, 각청 기사 등이다. 대구·부산·평양부윤도 같은 급이다.

직임관 중 친임관은 천황으로부터 직접 임명장을 받는 관리이다. 조선에서는 총독과 정부총감이 이에 해당한다. 직임 1~2등은 조선총독부의 본부 및 소속관서의 국장, 그리고 각 도지사들이다. 고등관 2등의 직임관에는 주임관에서 시작한 본부 사무관 및 기사, 철도국 이사들도 포함된다. 곧 고참 사무관들이 이에 해당되는데 경성부윤, 도참여관, 도의 내무·재무·경찰부장과 같은 급이다.⁶ 내무관료의 고등관 승진 경로를 도식적으로 정리하면, 도이사관(각도 과장) 또는 군수, 총독부사무관, 도참여관 또는 도사무관(각도 부장), 총독부서기관(총독부 과장), 도지사, 국장의 순서이다.

일제시기 고등관의 총수는 매해 1500~2000명인데, 전체 관료의 10% 정도이다. 고등관 전체 중에서 조선인은 대략 20% 내외인데, 조선인 고등관의 60% 이상은 지방관서에 소속되었다. 1938년 5월 현재의 조사에 따르면 총독부 본청 안에 고등관의 수는 약 230명인데 그 중에서 조선인 고등관은 사무관 5명, 기사 5명, 시학관 1명, 편수관 1명 등 12명에 불과했다.⁷ 이 수치는 그 이전이나 그 이후나 큰 차이가 없었다.

이처럼 고등관은 ‘관계의 꽃’으로서 조선총독부의 전체 관료 중에서도 10%에 지나지 않으며, 조선인은 더욱 제한된 숫자에 불과했다. 1930년대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관임관 자격을 부여하는 보통문관시험뿐 아니라 군고원, 면서기 선발시험의 경쟁률도 높아져가는 추세였다.⁸ 당시 관임관만 해도 군청 내에서조차 몇 명되지 않아 엄청난 지위를 누리고 있었던 상황에서⁹ 고등관의 사회적 지위는 말할 것도 없었다. 고등관의 출발점이었던 군수만 해도 대부분의 조선인 관료에게는 “수십 년을 관임관으로 떠돌다가 운이 좋아야 50세가 넘어서 겨우 고등관인 군수로 특채”¹⁰되는 것으로서 관직생활의 화려한 마감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런데 문관임용령은 관리의 자격을 학력과 시험과 경력을 기준으로 삼았다. 주임관의 길은 고등시험합격이 유일했다. 주임관은 학력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경력도 모두 주임관의 경력을 요구하였다. 다만 조선에서는 식민지 통치를 위한 인적 자원의 부족과 조선인의 회유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특별임용의 길을 조선인에 한해 열어준 적이 있다.¹¹

고등문관시험은 1894년에 처음 시행한 이래 “관계의 등용문”¹²으로 자리잡았다. 고등시험령은 1918년 큰 폭의 개정을 거쳤다가 1929년에 다시 개정되었다. 고등시험령은 주임문관, 외교관 및 영사관, 그리고 관검사의 임용자격시험을 규정하였다(제1조). 시

6 이상 朝鮮總督府, 『昭和十年七月一日現在 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職員錄』 2~3쪽

7 松花學人, 「總督府及各道高官人物評」 『三千里』 10-5, 1938.5, 59쪽

8 장신, 「1920·30년대 조선총독부의 인사정책 연구—보통문관시험 합격자의 임용과 승진을 중심으로」 『東方學志』 120,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3, 46~49쪽.

9 朴熙賢, 『五峰八十年』 星苑社, 1990, 41쪽; 장신(2002), 앞의 글, 55~56쪽.

10 任文桓, 『友村 回顧錄—江물은 흘러간다』 신예월, 1982, 47쪽

11 박이택, 「조선총독부의 인사관리제도」 『정신문화연구』 29-2, 2006.6, 290~296쪽.

12 「朝鮮人 三學徒 榮譽의 高文合格」 『매일신보』 1934.10.19(1)

험은 매년 1회 도쿄에서 시행되었다(제2조). 고등시험은 예비시험과 본시험으로 나누는데, 예비시험에 합격해야 본시험을 볼 수 있었다(제4조). 예비시험의 목적은 본시험의 수험능력을 확인하는데 있으며(제5조), 시험과목은 논문 및 외국어였다(제6조). 예비시험의 수험자격은 중학교 졸업자를 기준으로 하였으며(제7조), 고등학교 고등과 졸업자 및 대학예과 수료자 등은 예비시험을 면제받았다(제8조). 예를 들어 경성법학전문학교 졸업자는 예비시험을 면제받았지만 6년제 중등학교인 경성사범학교 출신은 예비시험을 치러야했다. 또 경성사범을 제외한 대구, 공주 등의 사범학교 출신들은 전문학교검정시험에 합격하여 중학교 졸업자격을 획득해야 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

본시험은 수험자의 학식 및 그 응용능력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제9조). 본시험은 행정과, 외교과, 사법과로 나누었는데, 동시에 두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제10조). 본시험은 다시 필기시험 및 구술시험으로 나누는데,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구술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제11조). 한 과의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그 다음해에 한해 그 과의 필기시험을 면제받았다(제17조). 한 과의 본시험 합격자로서 다른 과의 본시험에 응시하려는 수험생에게는 이미 수험한 과목의 시험을 면제해주었다(제18조).¹³ 행정·사법 양과 합격자의 등장은 이 조항에서 비롯되었다.

2) 조선인 합격자와 사회적 위상

최초의 조선인 고등문관시험 응시자를 알 수는 없지만¹⁴ 1923년에 메이지대학 졸업생 李昌根이 처음으로 행정과에 합격했다.¹⁵ 이후 합격자가 없다가 1927년에 張潤植, 1929년에 金永祥이 합격했다. 1931년부터 고등시험이 폐지되는 1943년까지 매해 조선인 합격자가 배출되었는데, 정확한 숫자는 파악되지 않지만 대략 140명 전후이다.¹⁶ 정확한 명단 및 숫자의 확정은 1941년 이후 등장하는 창씨개명한 조선인의 본명을 확인할 때 가능하다. <표 1>은 전체 합격자 및 조선인 합격자의 연도별 배출현황이다.¹⁷

- 13 예를 들어 행정과 합격 당시 헌법, 민법, 경제학의 필수과목과 상법이나 형법 등의 선택과목을 치렀다면 사법과 시험에서 공통되는 과목은 치르지 않아도 되는 규정이었다. 단 각 과의 핵심과목은 예외였다. 행정과의 행정법, 외교과의 국제공법, 사법과의 민법 또는 형법 중의 한 과목은 다시 시험을 치러야했다.
- 14 사법과의 경우 1919년에 사법성판검사시험에 응시한 金志健이 최초의 합격자였다. 김지건은 동경제일중학과 중앙대학을 졸업하였으며 합격 후에 교토지방법원에서 근무하다가 귀국하여 1922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다. 「各界鬪士—法曹界의 元老」 『조선중앙일보』 1933.7.28(4)
- 15 「高文試驗을 밋을 明大의 李昌根氏 합격할 가능성이 확실히 있다」 『매일신보』 1923.11.20(3); 「朝鮮人一名高文合」 『동아일보』 1923.12.18(1); 이기동, 앞의 글, 470쪽.
- 16 현재 합격자를 추정하는데 두 가지 설이 있다. 하나는 이기동(1985)의 133명으로서 정선이(2002)도 이에 따르고 있다. 이기동은 秦郁彦(1981)의 정리에 근거를 둔 것 같다. 秦郁彦은 『관보』에서 합격자 명단을 정리한 후 각종 자료를 이용하여 합격자의 출신학교와 첫 근무지, 최종 근무지 등을 밝혀 놓는 외에 별도로 조선인은 ‘조선출신’으로 표기하였다. 이기동은 국내에서 발간된 각종 인명자료를 활용하여 창씨개명한 한국인의 본명을 밝혀 놓았지만 창씨명을 병기하지 않아 제삼자의 확인이 어렵다. 다른 하나는 장세윤의 150여 명인데 강성태의 회고(「경성제국대학」 『중앙일보』 1971.5.5~22)를 토대로 추정한 수치이다.

표 1 고등문관시험 행정과 조선인 합격자의 연도별 추이

연도	합격자			연도	합격자		
	총원	조선인	비율		총원	조선인	비율
1923	204	1	0.4	1934	302	15	5.0
1924	333			1935	265	6	2.3
1925	331			1936	194	4	2.1
1926	331			1937	144	6	4.2
1927	295	1	0.3	1938	197	6	3.0
1928	371			1939	214	14	6.5
1929	336	1	0.2	1940	238	12	5.0
1930	204			1941	229	12	5.2
1931	252	5	2.0	1942	411	16	3.9
1932	238	3	1.3	1943	547	23 +@	4.2 +@
1933	326	14	4.3	총계	5,962	139 +@	

출전 : 秦郁彦, 『戰前期日本官僚制の制度・組織・人事』 東京大學出版會, 1981, 514~643쪽
 비율 : 합격자 전체 중 조선인 비율

다음으로 <표 2> 는 행정과 합격자의 최종출신학교를 정리한 것이다.¹⁸ 일본 전체로 보면 동경제국대학이 최다수를 차지하지만 조선인의 경우에는 경성제국대학이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¹⁹ 고등시험위원이 다수 교수로 있고 제국대학의 학풍이 관료양성을 목표로 하는 만큼 제국대학 출신이 전체 합격자의 70%에 이르는 점은 당연하다. 게다가 제국대학까지 진학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경제력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제국대학 관련자들은 상대적으로 수험준비에만 전념할 수 있었다.

당시 “고등시험합격이 관계 등용문의 유일한 패스포트” 이며 “고등시험에 합격하면 아무리 바보라도 내무부장까지는 보장”²⁰되는 분위기였으므로, 한 수험생은 고등시험 합격자 명단을 보는 순간 “내 앞날의 인생이 보장된 듯한 안도의 기분”²¹을 느꼈다. 또 경성제국대학을 졸업한 뒤 평북도청에서 근무 중 고등시험 행정과에 합격한 이흥배는, 합격 이후 자신의 달라진 위상을 아래와 같이 표현했다.

17 (內務省警保局保安課→高等試驗事務所), 「朝鮮人臺灣人ノ高等試驗合格者調査方ニ關スル件」, 1942.10.13. 1941년과 1942년의 합격자 숫자는 위의 자료에 근거하였다. 이기동은 1941년과 1942년 합격자로 각각 10명과 13명의 명단을 확정했는데, 여기에 李國泰(岩城國泰)와 佳日暎(松川日暎)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18 이 통계는 확인된 명단을 근거로 한 것이어서 잠정적인 자료임을 밝혀둔다.

19 정선이는 경성제국대학 조선인 졸업생의 고등문관시험(행정·사법 포함) 합격자를 53명으로 확정하고 명단을 밝혀 놓았지만(정선이, 『경성제국대학연구』 문음사, 2002, 205~209쪽), 필자는 사법과를 포함하면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한다. 김용덕(2006)은 41명으로 추정하였다.

20 須麻守人, 「朝鮮官僚論(4)」 『朝鮮行政』 1-4, 1937.4, 135쪽

21 金萬基. 『내가 걸어온 길』 東亞書籍株式會社, 1988, 26쪽.

표 2 고등문관시험 행정과 조선인 합격자의 최종 출신학교

출신 학교 연도	제국대학					日本	日本 專門	中央	中央 專門	明治	京城 法專	京城 師範	早稻 田	기타	계
	東京	京都	東北	九州	京城										
1923										1					1
1927			1												1
1929										1					1
1931	2					2				1					5
1932	1				1									1	3
1933	4	4	3	1	2										14
1934	1	4		3	6							1			15
1935	1	1			3						1				6
1936	2				1								1		4
1937					3					1				2	6
1938		1			3						2				6
1939	1	1	1		4		1	1	1	1	1	1		1	14
1940	2	2		1	4			1			1			1	12
1941	1			1	5				1			1		1	10
1942	2	3			7		1							1	14
1943	1	1	1	3	6			3	4				1	3	23
계	18	17	6	9	45	2	2	5	6	5	5	3	2	10	135

고등시험에 내가 합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신문기자의 인터뷰 신청이 쏟아져 들어오고 지방 유지들의 내방인사가 줄을 이었다. 그리고 도청 내에서는 모두들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고 평소에 인사도 없었던 다른 부나 과 직원이나 급사까지도 나와 마주치면 정중히 인사를 하곤 하였다. 나는 그날부터 도청내의 고등관식당 출입이 허용되어 도시사를 비롯한 고등관 간부들과 점심을 들게 되었고 외부로부터 도청 간부를 초청하는 행사나 연회에도 초청을 받게 되었다. 나는 고등시험 합격 2개월 만에 월급 65원의 사회서기에서 85원 월급의 도속으로 승진되어 농촌진흥과에 근무하게 되었다.²²

신문기자의 인터뷰 신청이 ‘출세담’ 또는 ‘성공담’ 을 듣는 자리라면²³ 지방 유지들의 내방은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사회적 신분의 상승을 의미했다. 고등관식당의 출입이나 고등관연회 초청은 다른 합격자들의 회고에도 나타나는데 합격자들로 하여금 고등관이 되었음을 실감하게 하는 주요한 통로였다. 급여의 증가는 말할 것도 없

22 李興培, 『金婚의 回想』 1983, 27쪽.

23 고등시험의 모든 합격자에게 인터뷰가 쇄도한 것은 아니었다. 고등시험 합격소식을 보도한 신문기사들을 대략 정리하면 응시자와 합격자가 드물었던 1920년대에는 대부분의 합격소식이 소개되었다. 합격자가 급증하는 1930년대에는 독학자나 수석 등 기사거리가 될 만한 것에 집중되었다.

었다. 출세에 도움이 되는 든든한 배경을 가진 혼담도 줄을 이었다.²⁴

그런데 고등시험의 합격은 단지 개인의 영광만은 아니었다. 그가 소속된, 아니 소속되었다고 믿는 모든 집단들의 영예였으며 집단의 위상을 높여주는 도구였다. 당시 대학의 우열을 평가하는 주요한 기준의 하나가 고문 합격자의 수였으므로 신생의 경성제국대학은 학교 차원에서 응시를 권유하였다.²⁵ 1920년대 후반 몇 명의 사범과 합격자를 배출한 경성법학전문학교는 제국대학 법과 출신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수업내용의 충실함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내세웠다.²⁶

또 고문 합격은 문중의 자랑이었으며,²⁷ 출신 지역 또는 고향의 자랑이었다. 각지에서는 고문시험 통과를 축하하는 환영회나 축하회를 개최했다.²⁸ 대개 신문에 보도되는 경우는 어려운 환경을 극복한 독학자였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사립소학교를 졸업한 뒤 고학으로 중학교와 대학을 다니면서 고문시험에 합격하여 금의환향하자, 지방 인사들이 어려웠던 과거와 양양한 전도를 찬양하는 뜻으로 환영회를 개최하는 식이었다.²⁹ 나아가 고문 합격은 “조선청년의 자랑”³⁰으로까지 격상되었다.

2. 고등문관시험 응시 동기

식민지 조선에서 고등문관시험이 젊은 인재들의 관심을 끈 이유로 전통적인 관존민비관념의 잔재를 들기도 하지만³¹ 이것만으로는 왜 1930년대에 지원자와 합격자가 증가했는지를 설명할 수 없다.

조선인 수험생의 응시 동기는 개인을 둘러싼 다양한 조건을 검토해야 하지만 우선 1930년대 들어 달라진 분위기를 들 수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극심한 취업난이었다.³² 총독부에 쌓인 이력서가 수천 매라는 보도가 나오는 상황 속에서³³ 조선 최고의 학부인 경성제국대학도 예외는 아니었다. 취직난이 심화되면서 경성제국대학 졸업생은 도쿄나 교토출신에게 밀리는 일마저 발생하였다.³⁴ 제국대학 출신끼리도 경쟁하는 마당에 고등문관시험 합격증서는 고등관의 임용을 보장해주는 유일한 안전판이었다.

〈표 3〉은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 후반까지 조선총독부의 고등관 후보자 채용 계획 및 실제 현황이다.

24 金萬基, 앞의 책, 33쪽.

25 李忠雨, 『京城帝國大學』 多樂園, 1980, 151쪽.

26 「法專出身의 四君 高文試驗에 合格」, 『동아일보』 1927.1.18(2); 「法專卒業生 高文合格者」, 『조선일보』 1927.1.19(2)

27 尹吉重, 『이 시대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호암출판사, 1991, 52쪽.

28 「蘇鎮燮氏 환영회」 『동아일보』 1939.11.28(3); 「高文合格한 兩君 축하회 성대」 『동아일보』 1939.12.28(4)

29 「高文試驗 통과한 金善太君 환영회」 『조선일보』 1939.11.3(3)

30 「조선청년에 또한 자랑 高文도 陸續 파쓰」 『매일신보』 1936.11.10(7)

31 김용덕(2006), 앞의 글, 115쪽.

32 이 시기 지식인의 전반적인 취업난에 대해서는 정선이(2002), 앞의 책, 141~151쪽 참조.

33 「총독부비서과에 이력서가 수천매」 『조선일보』 1931.2.14(2)

34 「성대 졸업생을 총독부서 등한시?」 『조선중앙일보』 1934.3.4(2)

표 3 조선총독부의 대학졸업 이상자 채용 계획 및 지원현황

연도	채용인원	지원현황	전형계획 및 결과	출전
1926	10	120~30		동아 270113
1927	40		학사 및 고문 합격자 10명 채용 예정 동경 소재 대학 졸업자 30명 채용 예정	동아 270113
1929	30 (朝日 각15)		경성제대 졸업자 7명 내정(朝4, 日3) 그 외 인원은 동경과 경성에서 전형	동아 290321
1930	약 30			동아 310214
1931	20	100	조선 내 대학졸업자 또는 조선인 고문합격자	동아 310214
1933	23 ³⁵	104	고문합격자(민족관계없이) 10명과 고시에 합격하지 않았으나 가능성 있는 조선인 13명	동아 330221
1934	25		고문합격자를 표준으로 채용	동아 340215
1936	10		고문합격자	동아 360130
1937	15~20	60		조선 370311
1938	20		고문합격자 중 11명 채용	조선 380414

1920년대 중반 총독부의 채용 원칙은 조선에서 일부를 채용한 뒤 상당수를 동경에서 선발하는 방식이었다. 아무래도 전형에는 고문 합격자나 제국대학 출신이 우대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1929년 경성제국대학에서 첫 졸업생을 내면서 7명을 내정한 뒤 나머지 인원은 역시 동경에서 채용했다. 주목할 것은 일본인과 조선인을 같은 숫자로 채용한다는 점이다. 1930년대에 들어서면 조선 내 대학 졸업자(경성제대)와 고문 합격자를 우대하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1933년도 마찬가지였다. 1929년부터 1932년까지 조선인 고문합격자의 총수가 9명에 불과하므로 고문합격자의 우대는 사실상 일본인 선발 원칙이라 해도 무방했다.

그런데 1933년 조선인 고문합격자의 수가 14명으로 증가하자 1934년 총독부의 채용 기준이 바뀌었다. 종래 경성제대 졸업자, 곧 조선 내 대학 졸업자는 고시를 합격하지 않아도 우선권을 주었지만 앞으로는 고시합격자를 표준으로 채용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면서도 일본 내 대학졸업자의 채용계획엔 변함이 없었다. 이 원칙은 이후에도 계속 견지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문에 합격하여 관리로 되는 데에 대한 사회적 압박도 상대적으로 약해졌다. 일본에 소재한 제국대학에서는 오랜 전통을 통해 고등문관시험 응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³⁶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한 경성제국대학도 처음에는 재학 중에 고문을 준비할 때는 주위의 눈총을 의식하면서 숨어서 했지만 점차 합격자가 늘어나면서 고문 열기

35 25명을 채용할 계획이라는 보도도 있다. 「26명 채용에 6배의 지원자」 『동아일보』 1933.4.7(2)

36 고등문관시험의 필기시험이 실시되는 매년 6월이 다가오면 대학도서관 변소의 소변통 속에는 혈염이 산란했다. 뿐만 아니라 도서관의 독서실로 올라가는 넓은 계단 중간에서 피를 토하고 쓰러지는 학생들도 더러는 있었다. 임문환, 「任文桓」, 한국일보사 편, 『財界回顧 4—元老企業人篇 IV』 1984, 410쪽.

가 높아졌다고 한다.³⁷

제국대학 출신들이 제국대학의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고문을 준비했지만 그 목적은 출세였다. 관리로 출세하면 돈(높은 급여)과 명예(사회적 지위), 그리고 권력이 주어졌다. 출세를 결심하는 동기는 다양했다. 고원, 촉탁, 순사, 속관 등의 현직관리는 자존심이나 고등관의 우월한 지위를 보고 새삼스럽게 결심했다.³⁸ 출세욕은 사범학교 출신들에게 잘 드러난다. 전봉덕은 경성사범학교를 졸업한 뒤 만주 봉천에서 교편을 잡다가 뜻한 바 있어 경성제국대학에 입학하여 1939년에 행정과와 사법과를 동시에 합격했다. 뜻한 바는 ‘道伯’, 곧 도지사였다.³⁹ 한희석도 일생에 대한 고민을 하던 중에 신문 광고를 보고 보통학교 교원으로 만족할 수 없다면서 수험생의 대열에 참여했다. 그는 충남사범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여 첫 근무지도 일급지인 대전으로 발령받았지만 전문학교검정시험, 예비시험, 본시험에 이르는 8년간의 독학생활을 감수했다.⁴⁰ 광주사범학교를 졸업한 뒤 보통학교 훈도로 있던 신용우도 ‘직업교사가 되느냐 비약을 해보느냐’ 갈등하다가 후자를 택한 경우였다.⁴¹

3. 조선총독부의 고등관 인사

고등문관시험은 고등관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자격시험이었지만 사실상 합격증서는 고등관 임명장이나 마찬가지였다. 다만 합격자의 수가 통상 200~300명 내외였으므로 자신이 원하는 부처로 가기 위해서는 경쟁을 치르는 게 필수였다. 일본인 고문 합격자에게 가장 인기 있는 곳은 일본 내무성과 대장성이었고 조선총독부는 거의 한직이었다. 내무성과 대장성 등의 채용 1순위는 고문 성적이었고, 또 동경제국대학 법과 성적을 주요한 판단기준으로 삼았다. 특히 전자는 이후 대신과 차관으로 승진하는 데도 주요한 기준으로 작용했다.⁴² 고문 성적을 우선하는 관례는 다른 곳도 비슷했을 것이다.

조선인들은 주로 조선총독부에 채용신청을 했다. 임용과 승진에서의 차별을 예단했다기보다는 가족이 있는 고향에서 근무하면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편을 택했을 것이다. 고문 합격자는 전형을 거쳐서 특별한 하자가 있지 않는 한 대부분 채용되었다.⁴³ 문제는 어느 곳에 배치되느냐 하는 것이었다. 1941년 합격자인 김원태의 회고는 몇 가지 사실을 시사해준다.

37 이충우, 앞의 책, 217쪽.

38 이홍배는 경성제국대학을 졸업한 뒤 평북도청에 고원으로 취직했는데, 동기생이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하여 같은 근무지로 부임한 것에 자극받아 시험을 준비했다.

39 「기록적 高文 돌파」 『매일신보』 1939.11.21(3)

40 韓熙錫, 「韓熙錫篇」, 高貞勳 外, 『名人獄中記』 元輝出版社, 1968, 230쪽.

41 申庸雨, 『나의回顧』, 普信閣, 1971, 17쪽.

42 水谷三公, 『官僚の風貌—日本の近代13』, 中央公論新社, 1999, 125~167쪽.

43 1937년 중일전쟁 이후 경기가 좋아지면서 고문 합격자들이 관계보다 실업계로 몰리는 바람에 총독부가 채용예정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한때 있었다. 「權力보다 金力을 주요—우수자는 민간회사로 관청지망은 극소수」 『동아일보』 1939.4.9(2)

소개편지를 가지고 서울의 한상룡씨 덕을 찾았다. 편지를 본 한씨는 “좀 일찍이 오지 않구서. 내가 벌써 고시통과자 4명을 총독부에 소개해 놓고 있는데 또 소개를 하면 나는 소개만 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소. 성패는 여하간 소개장을 써 줄테니 본부 美根 인사과장을 찾아가 보소” 하는 것이었다. 나는 곧바로 인사과장을 찾아갔더니 과장 왈 “좀 전만 하더라도 독학 합격자라고 관립대학 졸업자와 구별이 없이 채용해주었으나 지금은 관립대 졸업자가 너무 많아져 본부 채용이 어려우니 지방도지사 아는 분이 있으면 그 분을 찾아 지방채용을 부탁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였다. 본부 채용은 지방채용보다 장래 진출에 유리하므로 나는 “임지는 어디든지 좋으니 본부 채용을 해달라” 고 했더니⁴⁴

우선 지원자가 많아지면서 출신학교를 구분했다. 관립대학은 제국대학을 의미하고, 독학자는 사립대학 졸업자를 포함하는 데 같은 조건일 경우 전자를 우대한다는 것이다. 또 급여가 국비에서 지급되는 본부채용이 지방비에서 지급되는 지방채용보다 향후 보직임용과 승진에 유리하다는 점이다. 이즈음에는 원하는 곳에 채용되고 발령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조건 외에 유명인의 ‘소개’가 새로운 조건으로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⁴⁵

채용된 고문 합격자들은 고등관견습이면서 판임관 6급의 속관으로 각 임지에 배치되었다. 첫 임지는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전망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했다. 지방관서보다는 총독부가, 같은 지방이라도 지방관서보다는 소속관서의 지사(국)이 우대를 받았다. 또 생활이 편리하다는 점에서 지방보다는 경성을 선호했다. 같은 이유로 지방관서라도 군청보다는 도청에 배속되기를 원했다. 승진과 보임도 마찬가지였다.

현재까지의 고등관 연구로는 조선인보다 일본인이, 그리고 동경제국대학 출신이 고등관의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있음이 밝혀졌다.⁴⁶ 6고(岡山)와 동경제대 법과를 졸업한 임문환도, 자신보다 고문 및 대학성적이 좋지 못했던 일본인 고교·대학 동기생(秋山昌平)이 초임 발령에서 승진까지 우대받는 것을 보고 차별을 느꼈다고 회고했다.⁴⁷

이를 증명하기 위해 조선인의 고문합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931년부터 창씨개명이전인 1940년 이전의 조선인 고문 합격자를 모집단으로 선정했다. 또 조선인과 비교하기 위해 같은 조건을 가진 일본인 고문 합격자를 추출했다.⁴⁸ 이 기간 동안의 대상자는 <표 4>와 같다. 현직은 고원, 촉탁, 순사, 속관 등으로 조선총독부의 각 관서에 근

44 金元泰, 『槐南文稿』 錦英文化社, 1988, 261쪽.

45 1943년 7월의 최종 합격자는 조선인만 해도 23명 이상이었는데 조선총독부의 조선인 채용자는 7명에 불과했다.(金萬基, 앞의 책, 29쪽). 이처럼 합격자가 증가하면서 채용되지 못하는 고문합격자가 나오는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46 안용식, 『한국관료연구』 大永文化社, 2001, 291~307쪽. 안용식의 연구는 1944년 9월 현재 근무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47 任文桓(1982), 앞의 책, 256쪽

48 단 일본인과 조선인 모두 첫 임지가 조선이었던 경우로 한정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취직했다가 조선으로 전근한 경우는 제외했다. 동경부속이었던 최하영(1933년 합격)이 그런 경우에 포함된다. 또 고등문관시험 합격자라도 관료를 하지 않은 고병국(1933년 합격)이나 사법관으로 진출한 노용호(1934년 합격) 등을 제외했다.

표 4 1931 ~ 1940 년 고등문관시험 행정과 합격자 중 조선에서 초임근무한 자

조선인			일본인			총계
신규임용	현직	계	신규임용	현직	계	
49	24	73	78	30	108	181

출전: 秦郁彦, 『戰前期日本官僚制の制度・組織・人事』東京大學出版會, 1981, 567~643쪽

표 5 조선에서 초임근무한 1931 ~ 1940 년 고등문관시험 행정과 합격자의 최종학력

	제국대학 (56/89)					사립대학			기타 ⁴⁹	미상	계
	東京	京都	九州	東北	京城	明治	日本	中央			
조선인	10	11	5	4	26	2	2	2	11	—	73
일본인	46	9	7	4	23	1	3	1	12	2	108
계	56	20	12	8	49	3	5	3	23	2	181

출전: 秦郁彦, 앞의 책(1981); 이기동, 앞의 글(1985).

표 6 고등문관시험 합격자의 초임근무지 민족별 비교

	총독부	전매국	철도국	체신국	세무감독국	감옥	지방관서	기타	계
조선인	13	3	3	2	3	—	48	1	73
일본인	47	5	15	8	2	3	26	2	108
계	60	8	18	10	5	3	74	3	181

출전: 安龍植 編, 『韓國行政史研究』(1993·1994), 大永文化社; 安龍植 編, 『朝鮮總督府下日本人官僚研究Ⅱ・Ⅲ』(2002·2003), 延世大學校, 社會發展研究院을 재가공.

무하면서 합격한 경우이며, 교직에 있다가 퇴직한 경우는 신규임용으로 처리했다. <표 5> 는 <표 4> 에서 언급된 인물들의 최종 학력이다.

먼저 <표 6> 에서 보듯이 속관으로서의 초임근무지, 곧 고등관견습을 한 관청을 민족별로 비교했다. 조선인은 전체 73명 중 48명, 곧 65.5%가 지방관서에서 초임근무를 시작했고, 총독부는 17.8%에 지나지 않았다. 반면에 일본인의 43.5%는 총독부에서 관리의 첫 발을 디뎠고 지방관서(24.1%), 철도국(13.9%), 체신국(7.4%) 이 뒤를 이었다.⁵⁰

49 일본인은 京城高商 2명, 釜山中·鹿兒島師範·仙臺高工·日本大學專門部法科(日專法)·中央大學專門部法科(中專法), 早稻田大學專門部法科(早專法)·長崎高商·朝倉中學 각 1명이다. 조선인은 京城法專 4명, 京城師範과 忠南師範 각 2명, 日專法·東京二中·北海道大水産專·早稻田大學 각 1명이다.

50 현직관리가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할 경우 신규임용처럼 별도의 고등관견습 기간을 두지는 않고 현직에서 승급되거나 이후 인사에서 가산점을 준 듯하다. 현직관리의 초임근무지는 대부분 기존의 근무지와 같음을 밝혀둔다.

표 7 고등관 승진자 보직의 민족별 비교

	도이사관 (도과장)	군수	경찰관강습 소교수	체신 부사무관	전매국부 사무관	철도국 부참사	사세관 세무서장	미상	기타	계
조선인	2	55	1	2	1	2	1	9(2)	0	73
일본인	51	3	6	7	4	10	3	19(8)	5	108

* 비교: 미상의 () 숫자는 이사관을 거치지 않고 총독부사무관으로 바로 승진한 경우.

*출전: 표6과 같음

출신학교별로 보면, 일본인의 총독부 발령비율은 경도제대 55.6%(5/9명), 동경제대 50%(23/46명), 경성제대 43.5%(10/23명), 기타학교(사립대학 포함) 35.3%(6/17명)의 차례였다. 지방관서 발령비율은 경성제대 30.4%(7명), 기타학교 21.1%(4명), 동경제대 19.6%(9명)였다. 동경제대(17.4%)와 기타학교(26.3%) 출신은 지방관서와 비슷한 비율로 철도국에 배치되었다. 일본인의 경우 경도제대와 동경제대가 상대적으로 우대를 받고 그 다음 순위가 경성제대였다. 제국대학의 위계와 사립대학 또는 독학출신자에 대한 제국대학 출신자의 우위를 알 수 있다.

반면에 조선인의 지방관서 발령비율은 동경제대 80%(8/10명),⁵¹ 기타학교 70.6%(17/12), 경성제대 65.4%(17/26명), 경도제대 54.5%(6/11명)이었다. 숫자는 얼마 되지 않지만 총독부 발령비율은 경도제대(27.2%), 경성제대(23.1%), 기타학교(17.6%)의 차례였다. 전매국, 철도국, 체신국, 세무감독국 등은 그 숫자가 적어서 비율 산출의 의미를 찾기 힘들다. 조선인은 경도제대 출신을 제외하면 제국대학 출신자에 대한 우대를 찾을 수 없다. 또 조선인 최상위 출신자의 총독부 발령비율(경도제대, 27.2%)보다 일본인 최하위(기타학교, 35.3%) 출신자의 비율이 더 높고, 일본인 최상위 출신자의 지방관서 발령비율(경성제대, 30.4%)이 조선인 최하위(경도제대, 54.5%)보다 낮은 초임발령에서 일본인 우위를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경성제대 출신에게도 동일했다.

〈표 7〉에서 보듯이 고등관견습 때의 일본인 우대는 최초의 고등관 임용 시점의 보직에서도 나타났다. 견습 딱지를 떼고 처음으로 고등관에 임용된 조선인의 75.3%는 군수에 보임됐으며 도의 과장급인 이사관은 2명에 불과했다. 조선인은 출신학교를 불문하고 군수로 발령받는 게 일반이었다. 반면에 일본인은 2.8%인 3명이 군수로 임명되고, 도이사관은 전체의 47.2였다. 도이사관급 보임의 경우 기타학교 출신도 31.6%였다. 그 외에도 일본인은 철도국, 체신국, 전매국 등 다양한 곳으로 배치되었다.

다음으로 사무관 승진현황을 살펴 보았다.⁵² 일본인 100명당 80명이 사무관으로 승진

51 九州帝大도 5명 중 4명이 지방관서로 발령났다.

52 사무관 미승진자의 연도별 추이는 아래와 같다. 1939년 이후 합격자에게서 미승진이 많이 나타나지만 미승진자는 193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은 이사관 승진(군수)도 확인되지 않는 사람.

	1930	1931	1932	1933	1934	1935	1936	1937	1939	1940	계
조선인	0	0	6	3(1)	4	2	6	2(1)	8	9(5)	40(7)
일본인	3	2(1)	1(1)	2(1)	1	2(1)	2	2(2)	1(1)	7(5)	22(12)

출전: 본문의 표6과 같음

표 8 고등문관시험 합격자 중 사무관 승진자의 민족별·학교별 조사

단위 : 명(%)

		동경제대	경도제대	구주제대	동북제대	경성제대	기타학교	계
조선인	총원	10	11	5	4	26	17	73
	승진자	10(100)	4(36.4)	3(60.0)	0	9(34.6)	7(41.2)	33(45.2)
일본인	총원	46	9	7	4	23	17	106
	승진자	36(78.3)	9(100)	6(85.7)	2(50.0)	22(95.7)	9(52.9)	85(80.2)

출전: 표6과 같음

표 9 고등문관시험 합격자의 출신학교별 승진소요기간 (단위 : 월)

합격년도	속관 → 이사관 승진		이사관 → 사무관 승진		속관 → 사무관 승진	
	조선인	일본인	조선인	일본인	조선인	일본인
동경제대	20.8	28.6	40.1	25.6	57.9	51.7
경도제대	16.7	27.3	80.8	41.0	92.5	68.3
구주제대	33.3	30.6	73.7	34.0	107.0	64.7
동북제대	31.7	18.8	—	26.0	—	45.0
경성제대	22.2	24.9	48.3	24.5	70.1	47.2
기타학교	26.4	34.7	53.7	34.8	79.4	63.1
계	23.3	28.4	53.8	28.8	74.5	54.3

출전: 표6과 같음

한 데 비해 조선인은 그 절반을 겨우 넘는 45명에 그쳤다. 경성제대 출신에게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두드러졌다. 출신학교별 특징을 보면, 일본인의 제국대학 출신은 비교적 높은 승진율을 보인 반면에 사립학교와 독학자는 절반을 가깝스로 넘겼다. 조선인이라도 동경제대 출신은 임관하면 최소한 사무관까지는 보장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승진소요기간을 살펴보았다.⁵³ 고등관견습 기간, 곧 속관에서 이사관급으로 승진하는 기간은 대략 2년 내외였다. 조선인이 일본인보다 평균 5개월 빠르지만 관청의 인사수급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존재했다. 그런데 이사관급에서 사무관급으로의 승진소요기간은 역전되었다. 일본인은 평균 2년 5개월이 걸리는 데 비해 조선인은 4년 6개월이 소요되었다. 곧 개인별 능력차, 출신학교 등 여러 요인이 있지만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하면 임용 후 일본인은 4년 6개월, 조선인은 6년 2개월을 근속한 후 사무관으로 승진할 수 있었다.⁵⁴

53 고문합격자의 채용은 보통 합격 다음해에 시작되어 4월부터 근무했다. 현직자의 경우 합격 후 몇 개월 이내에 승급이 되었지만 승진소요기간 산출을 위해 4월부터 임용된 것으로 간주하여 통계처리했다.

54 1930년대 후반 들어 승진소요기간이 모든 영역에서 짧아졌다. 그 이유로서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이후 일본인의 군복무로 인한 행정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 창씨개명한 조선인의 경력 누락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출신학교별로 보더라도 위의 추세와 큰 차이는 없다. 단 사무관 승진뿐 아니라 기간에서도 조선인 동경제대 출신자들은 조선인으로서의 핸디캡보다는 동경제대의 후광을 더 받았다. 반면에 경성제대 출신의 조선인은 같은 조건의 일본인에 비해 사무관 승진 과정에서 심하게 차별을 받았다고 느낄 조건이었다.

4. 식민지 엘리트의 정체성

고문시험에 합격한 조선인들은 조선에서 손꼽히는 엘리트였다. 고문 합격자들의 엘리트 의식은 단순히 가문이 좋거나 수재인테서 오는 것만이 아니라 치열한 경쟁을 뚫고 당당히 합격한 데서 나온 것이기도 했다. 고문 합격자들은 교육과 수험과정을 통해 관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을 습득했다. 1930년대 합격자들은 시험을 준비하면서 최소한 9과목에 통달해야 했다. 헌법, 행정법, 민법, 경제학 등의 필수과목은 정책이나 법안을 입안하고 실행해야 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의 습득을 목표로 하며, 선택과목은 그 전문지식을 보완할 폭넓은 상식의 이해를 갖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⁵⁵

학업과 수험과정을 통해 전문지식과 상식을 겸비했다면 평균 2년의 고등관견습 생활은 고문 합격자의 특전을 최고로 얻는 시기였다. 곧 업무를 맡더라도 책임을 지는 특정 업무보다 가능한 시야를 넓혀주는 일을 맡았다.⁵⁶ 이러한 과정과 관료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얻는 경험을 토대로 전문성은 더욱 키워졌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총독부의 정책 입안에 참여하고 실행·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당대의 표현을 따르면 고문 합격자들은 “중학 고등학교 帝(國)大學을 순서로 수업한 근대지식인”⁵⁷이었다. 그들은 학교에서 지식뿐 아니라 동문으로서의 강한 연대감과 엘리트 의식을 형성했다. 치열한 경쟁을 통해 선발되었다는 선민의식, 폐쇄적 기숙사 생활을 통한 우월한 자의식⁵⁸ 등은 일본의 舊制高校·제국대학 출신뿐 아니라⁵⁹ 경성제대 출신들에게도 익히 보이는 현상이었다.

이렇게 형성된 동문끼리의 동질감은 매우 강해서 경성제대를 제외하면 조선인과 일본인의 구분이 무의미할 정도였다.⁶⁰ 이는 고문 합격자도 마찬가지로 동지적 결합이 매

55 선택과목은 철학개론, 윤리학, 논리학, 심리학, 사회학, 정치학, 국사, 정치사, 경제사, 국문 및 한문, 상법, 형법, 국제공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재정학, 농업정책, 상업정책, 공업정책, 사회정책 중 셋을 선택하고, 필기시험에서는 행정법과 필기시험에서 선택하지 않은 과목 중 둘을 택하였다.

56 韓熙錫, 『韓熙錫篇』, 高貞勳 外, 『名人獄中記』 元輝出版社, 1968, 233쪽; 坪井幸生, 앞의 책, 70쪽.

57 北岳山人, 「總督府 朝鮮人 高等官評」 『三千里』 12-3, 1940.3, 73쪽

58 우월의식은 스스로의 아이덴티티를 증명하기 위해 옷과 모자를 찢는 ‘弊衣破帽’ 나 신입생 환영의식인 ‘스툼’ 등으로 나타났다. 정선이(2002), 앞의 책, 74~75쪽.

59 조선인 합격자 중 경성제대를 포함한 제국대학 출신은 전체의 70%를 넘었고, 舊制高校 출신은 30명이 확인된다.

60 당시의 총독부 인사과장 기라(吉良喜重) 씨는 나의 6고 선배이고 동시에 동고 보트부 선배이기도 했다. 고등학교 동창끼리의 단결은 말할 것도 없지만 특히 고등학교 운동부의 선수 선배 간의 친교는 일반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돈독한 것이었다. 任文桓 (1982), 앞의 책, 61쪽.

우 강할 뿐 아니라 채용 연차에 따른 선후배간의 질서가 매우 엄격했다. 선배는 후배를 지도할 임무를 지니고, 견습시절에는 일상 업무 외에도 요리집의 연회에서 고급 호텔이나 레스토랑의 모임을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하였다.⁶¹

이처럼 고문 합격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과 상식을 겸비한 데다가 여러 층위의 동문집단을 배경으로 두고 있었다. 자신과 집단의 능력에 대한 무한한 신뢰는 관청에 발령을 받은 뒤에도 계속되었다. 고문시험 합격자의 대다수는 지방의 군수로 발령을 받았는데 그 때의 나이는 대개 30세 내외였다. 대개 군수직이 오랜 관료생활에 대한 보상차원의 것이었으므로 군정의 일상업무는 일본인 내부과장이 전결하기 일수였다. 또 직급은 부하지만 일본인만 임명되는 경찰서장에게 조선인 군수가 정면으로 대항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었다.

그런데 한 조선인 군수(임문환)가 종래의 군수와 달리 일본인 경찰서장과 정면으로 충돌하였다.⁶² 일본인이 조선인을 무시한 데서 충돌이 시작되었지만 조선인 군수의 맞대응은 30세의 패기만으로, 또 조선인의 정체성으로 뒷받침 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곧 ‘군수 임문환’은 ‘조선인 군수’가 아니라 6고와 동경제대의 졸업자이며 고문시험 합격자인 임문환’이었다. 그냥 육고인, 동대인이며 몇 년도 고문합격자가 그의 자신감의 원천이었다.

(제국) 대학 출신, 고문 합격자라는 간판은 그것을 갖지 못한 일반 관료들과 구분짓는 중요한 차이였다. 그러나 동질감과 연대감을 형성했다고 믿는 고문 합격자들끼리도 차이는 존재했다. 최초는 첫 월급을 받을 때 느끼는 조선인이라는 자각이었다. 같은 학교를 나오고 때로는 고문 성적도 오히려 좋은데, 단지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가봉을 포함해 자기의 두 배에 가까운 월급을 받아갈 때면 예외없이 조선인임을 느낄 수 밖에 없었다.

급여 외에 조선인임을 느끼게 되는 계기는 人事였다. 초임발령지, 견습기간, 사무관 승진에서 일본인 동기보다 늦다는 차별을 느끼는 조선인 관료가 적지 않았다. 실제로 고등관견습 기간을 제외하면 승진과 보직의 모든 영역에서 일본인 고문 합격자를 우대했다. 동경제대 출신은 조선인이라도 일본인과 비슷한 경로를 밟을 수 있었지만 동경제대 출신의 일본인과 비교할 수는 없었다. 특히 대부분 조선에서 교육받은 경성제대 출신의 동기생이 단지 일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 보다 우대를 받는 것을 본 조선인들의 박탈감은 상당히 컸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차별도 계층적이었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 싶다. 인사의 결과를 보면 대체로 동경·경도제대(일) > 경성제대(일) > 기타학교(일) = 동경제대(조) > 경성제대(조) > 기타학교(조) 의 차례였다. 차별은 존재하고 불만도 있었지만 상대적이었다. 전반적인 차별 속에서도 일본인보다 앞서 나가는 조선인 관료도 있었고⁶³ 동경제대를 나온 일본인도 승진을 못하거나 늦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인사의 결과는 개인 능력의 유무로

61 坪井幸生, 『ある朝鮮總督府警察官僚の回想』草思社, 2005, 70쪽

62 任文桓, 『友村 回顧錄—江물은 흘러간다』, 46~47쪽.

환원되었다. 일본 대장정보통문관시험에 합격하여 오사카와 교토에서 판임관을 역임하고, 1943년에 고문 행정과에 합격하여 조선으로 진출된 김만기도 차별을 느꼈다. 그것은 가봉처럼 식민지 자체에 대한 차별로서 고등관 직무에 관련된 것은 아니었다.⁶⁴

조선인 고등관료는 개인의 이해관계에는 민감했지만 스스로 관료의 길을 선택했으므로 차별을 구조적으로 또는 근본적으로 타개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 일단 정책이 결정되면 관료는 그 일을 수행하는게 의무였다. 마찬가지로 가봉이나 인사의 불균형이 있어도 그것을 입밖으로 이야기할 수 없었다. 선택의 길은 많지 않았다. 총독부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집행하거나⁶⁵ 일부 군수의 주장처럼 주어진 재량권 내에서 군민의 인적·물적 동원의 피해를 줄이는 것이었다. 단 후자라도 일본의 패망을 예측하지 않은 이상 해방될 당시까지 근무한 그들 기억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맺음말

고등문관시험 행정과의 조선인 합격자는 1930년대 들어서 급증하였다. 1930년대의 극심한 취업난과 민족해방운동의 상대적 둔화, 관료 양성에 충실한 제국대학의 분위기와 함께 시험 “패스”를 통한 출세지향의 욕구가 이를 뒷받침하였다. 대학을 졸업한 수재라도 마땅히 그 능력을 발휘하기 힘든 조선에서 사회적 신분의 상승을 의미하는 고등관료는 매력적인 직업이었다. 특히 어느 정도의 경제적 배경과 자신의 학력을 바탕으로 한 공정한 경쟁, 곧 각종 시험은 조선의 젊은 인재들에게 도전해 보고픈 욕구를 불러 일으켰다.

고등문관시험의 합격자들은 합격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 강한 엘리트 의식을 형성했다. 치열한 시험 경쟁을 통과한 자들만이 갖는 자부심과 동질성은 자신들만의 결합을 더욱 강하게 하였다. 게다가 학업과 수험과정에서 습득한 전문지식과 상식은 정책을 입안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자신감의 원천이 되었다. 엘리트 코스를 거치는 동안 조선인 합격자들은 ‘조선인 관료’로서가 아니라 자신이 소속되어 동질감을 형성했던 집단과 아이덴티티를 공유했다. 그것은 ‘00고 출신 관료’, ‘00제국대학 출신 관료’, 또는 ‘몇 년도 고문 합격자’ 등으로서 일본인과 조선인의 구분을 굳이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었다.

이러한 조선인 합격자들이 조선인임을 새삼 느낄 때는 급여를 수령하고 사령장을 받

63 1935년도 합격자 張壽吉이 대표적이다. 그는 普成高普와 3고(京都)를 거쳐 1936년에 동경제대 법과를 졸업하면서 총독부속으로 임용되었다. 제대 재학 중 병으로 두 번이나 휴학을 했는데도 전체 5등으로 고문을 통과했다. 그는 임용 후부터 계속 총독부에 근무하면서 2년 7개월 만에 재무국 사무관으로 승진했다. 北岳山人, 「總督府高等官評」 『三千里』 2-3, 1940.3, 71쪽.

64 해방 이후 대한민국정부에서 근무한 총독부 출신들은 급여·인사에서의 차별을 지적하면서도 관료시스템과 업무효율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65 「총독부 고등관 제씨가 진시하 조선민중에게 진하는 글」이라는 주제로 桂珽淳(대동아공영권건설), 韓東錫(상공업자의 활로와 저물가정책), 李昌根(생산확충운동) 등이 『三千里』(13-4, 1941.4)에 발표한 것이 대표적이다.

는 순간이었다. 가봉과 인사는 불합리하지만 고착화된 제도였고 개개인의 관료가 문제를 제기하여 풀릴 문제는 아니었다. 오히려 관료집단 밖에서 ‘차별’ 일반의 문제로 해결할 과제였다. 그러나 고문 합격자는 정책적 고려로 승진한 ‘특진조’와 달리 실력으로 당당히 관계에 오른 관계 지방학생의 ‘美望의 的’이었다.⁶⁶ 달리 말해 그들은 실력 양성에 성공한 조선인의 표본이며, 총독부가 차별의 구실로 삼았던 ‘民度’ 향상의 상징이었다. 그들이 인사에서 차별을 느끼고 있다 하더라도 조선사회에서 그들의 지위는 확고했으므로 차별은 개인의 문제였다. 그들은 조선인이었지만 관계에 입문하기까지의 과정은 조선인임을 의식할 필요가 없었다. 차별을 느끼면서 조선인임을 자각했지만 그구조적으로 차별을 극복하려는 노력은 없었다. 그들은 조선인 사회의 최상층으로서 불만을 넘어서는 결단을 하는 순간 그들이 지닌 배경과 ‘출세의 꿈’을 접어야했기 때문이었다.

要 旨

本論文は、日帝下時代に於ける朝鮮人高等官の形成と、彼らの存在性を明らかにするところにその目的がある。その分析対象として高等文官試験行政課の合格者をあげる事とする。

朝鮮人の高等文官試験行政課の合格者は、1930年に入ってから急増した。1930年代の深刻な就職難と民族解放運動の衰え、官僚養成に忠実な帝国大学の雰囲気と共に、試験にパスするという事に対する出世欲求がこれを後押しした。大学を卒業した秀才でもその能力を発揮するのが難しい朝鮮にあって、社会的身分を向上させる高等官僚は魅力的な職業であった。特に、ある程度の経済的土台と自分自身の学歴を土台にした公正な競争—すなわち各種の試験は、朝鮮の若い人材たちにとって挑戦してみるべき欲求を呼びおこさせた。

高等文官試験の合格者は、合格に到るまでの過程を通じて強いエリート意識を確立させた。激しい試験競争に通過した者たちだけが持ち得る自負心と同僚心は、彼らだけの結合をより一層強いものとさせた。その上、学業と受験の過程で習得した専門知識と常識は政策立案し、業務を遂行させる自信の源泉となった。このエリートコースを経過する間に、朝鮮人合格者たちは‘朝鮮人官僚’としてではなく、自身が所属し同僚心を感じている集団とその存在性を共有していた。それは‘○○高出身官僚’、‘○○帝国大学出身官僚’、または‘何年度高文合格者’という様に、日本人と朝鮮人の区別をあえて必要としない内容であった。

このような朝鮮人合格者たちが、自らが朝鮮人であることを再び思い知らされるのは、給与を受領する時、そして辞令を受ける瞬間であった。給料と人事は不合理であったが、固着化された制度であり、官僚一人一人が問題を提起して解決出来る問題ではなかった。官僚集団としてではなく、それ以外の‘差別’という問題として解決すべき課題であった。

66 北岳山人, 「總督府高等官評」 『三千里』 12-3, 1940.3, 72쪽

彼らは差別を感じながら、朝鮮人であることを自覚した。しかし構造的に差別を克服しようとする努力はしなかった。彼らは実力の養成に成功した朝鮮人の標本であり、総督府が差別の口実とした‘民度’向上の象徴であり、朝鮮人社会の最上層であった。もし彼らが、これらの不満を爆発させようと決断するならば、その瞬間彼らが得た背景と‘出世の夢’をあきらめ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